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

- ▶ 일시: 2012년 7월 6일(금) 15:00~17:30
-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

시 간	내 용
14:30~15:00	▶ 사전등록
15:00~15:10	▶ 개회식 사 회 :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장) 개회사 :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5:10~15:40	▶ 주제발표 발표 1 : 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결과 장근영 (연구기획·대외협력팀장) 발표 2 :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김기현 (기획조정본부장)
15:40~17:00	▶ 토론 김광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송병국 교수(순천향대) 이광호 교수(경기대) 최원기 선임연구위원(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 이상 가나다순
17:00~17:30	▶ 종합토론
17:30	▶ 폐회

개 회 사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원 23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제19대 국회에게 청소년정책 방향을 묻는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청소년육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이후 소속이나 명칭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청소년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저희 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입법부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입법부의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반영하는 목적으로 특별기획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9대 국회의원 120분의 정책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안과 연계하여 향후 청소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제19대 국회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귀한 시간 내어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송병국 교수님, 이광호 교수님, 최월기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김광진 제19대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의 삶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와 합의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목 차

▣ 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결과	1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대외협력팀장)	
▣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	37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발표 1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결과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대외협력팀장)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결과

2012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서는 개원 23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가적으로는 제19대 국회의 개원,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이기도 하다. 이에 본원에서는 차기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제안을 묻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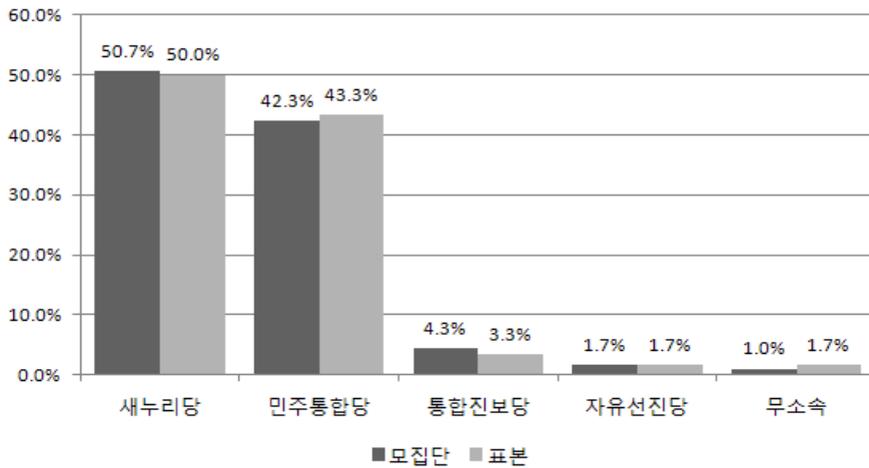
본 조사는 2012년 6월 11일~22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하여 각 국회의원별로 직접 조사자가 방문하여 의견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조사에 응한 모든 의원들을 표집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표집방식은 무응답자들을 체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조사결과에 편향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본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특별한 대안이 없고 조사 결과 정당별 응답율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응답자 특성에 의한 편향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이 응답했다. 소속정당별로는 전체 무소속의원 3명 중 2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명 소속의원 중 40.9%인 52명이 응답해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은 5명 의원 중 2명(40.0%), 새누리당 소속의원의 응답율은 152명 중에서 39.5%인 60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소속의원 13명 중 4명이 응답해 30.8%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표본과 모집단에서의 정당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조사 결과가 제19대 국회에 참여한 정당의 의견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1 소속정당별 응답율

소속	모집단	표본	응답율
새누리당	152명	60명	39.5%
민주통합당	127명	52명	40.9%
통합진보당	13명	4명	30.8%
자유선진당	5명	2명	40.0%
무소속	3명	2명	66.7%
합계	300명	120명	40.0%



[그림 1] 모집단과 표본에서의 각 정당별 사례 분포 비교

2. 조사내용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는 크게 청소년관련 환경 요인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시급성 평가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의견조사에 사용된 환경요인과 정책목표의 목록은 정책적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안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첫 번째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소들 중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었다. 각각의 환경요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통계수치를 간략하게 부연하였다. 본 조사지에 포함된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환경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환경요인 목록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연구에서 산출된 목록을 근거로 선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환경 요소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들 요소 중 중요도 순으로 3개만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2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대상 청소년 환경변화 목록

핵심문장	부연자료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인 감소	- 청소년(9~24세) 인구 구성비: '80년 36.8% → '12년 20.4% → '30년 13.7%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 이혼가구: '90년 17만 가구 → '10년 127만 가구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 한국의 외국인 거주 증가율: '05년 53만 명 → '11년 126만 명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 '05년 6,121명 → '11년 36,676명 증가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지 이행 지연	- 대기업 입직연령: '98년 남 26세, 여 23.5세 → '09년 남28.7세, 여25.6세 - 초혼연령: '01년 남 29.5세 여 26.8세 → '11년 남 31.9세, 여 29.1세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 우리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 학교폭력 피해율: '09년 9.4% → '10년 11.8% → '11년 18.3%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 상대빈곤률: '89년 8.6% → '99년 12.4% → '10년 14.9%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률: '07년 68.2% → '10년 88.8%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 '11년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09년 64.3점, '10년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

핵심문장	부연자료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 '11년 고교생 3만8787명이 중도탈락, 초·중·고 전체로는 7만6489명이 중도탈락 - '99년 청소년 가출경험율 8.6%, '11년 13.1%로 증가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06년 11.6% → '10년 14.3%, 청소년 우울감 경험율 ('05)29.9% → ('10) 37.4% '10년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 1위 13% 고의적 자해(자살)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 청소년들은 교육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 뚜렷, 노스페이스 등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 확대

2) 청소년 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시급성 평가로서 역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안)에서 주요 정책목표로 선정한 정책목표들을 중심으로 의견조사 목록을 작성하였다. 정책목표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앞서와는 달리 각 정책목표별로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혀 시급하지 않음(1점)-보통(3점)-매우 시급함(5점) 까지 평가하였다. 의견조사 대상 정책목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 시급성 평가대상 정책목표 목록

정책목표 목록
1.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2.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3.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4.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5.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6.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7.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8.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9.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1.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12.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정책목표 목록

13.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15.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16.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17.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3. 조사결과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정된 청소년 환경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요소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대상으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지연 문제를 손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0.8%인 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선택했다. 그 외에 의원들이 선정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입안 대상 청소년 환경요인은 입시경쟁 및 사교육확대에 따른 불균형적 성장(58명, 48.3%), 청소년 유해환경 및 폭력 심화(51명, 42.5%),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증가(48명, 40.0%) 순이었다.

각 정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환경요인의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정결과는 전체 응답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은 청년고용문제와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정했으며(75%),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 문제(25%)의 비율도 높았다. 전체 응답사례수가 4명으로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당간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응답자가 2명으로 선정비율을 비교하기에는 지나치게 사례수가 적어 유효한 추세를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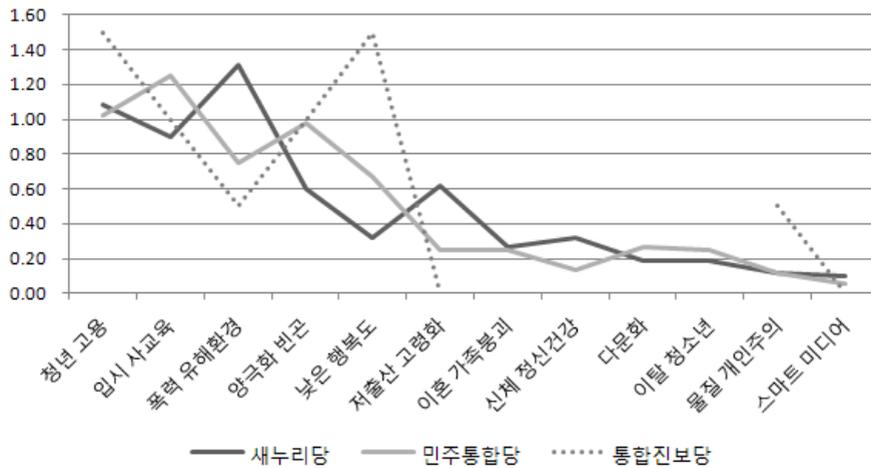
표 4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결과 (1-3순위 전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전체
청년 고용 불안	51.7%	48.1%	75.0%	50.0%	50.0%	50.8%
입시경쟁과 사교육	45.0%	53.8%	50.0%	50.0%	0.0%	48.3%
청소년 폭력 및 유해환경	51.7%	34.6%	25.0%	50.0%	0.0%	42.5%
양극화와 빈곤가정 청소년	31.7%	46.2%	50.0%	50.0%	100.0%	40.0%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16.7%	32.7%	75.0%	0.0%	50.0%	25.8%
저출산과 고령화	28.3%	9.6%	0.0%	50.0%	0.0%	19.2%
이혼/가족붕괴, 가족돌봄 약화	16.7%	17.3%	0.0%	50.0%	100.0%	18.3%
다문화 청소년 증가	13.3%	23.1%	0.0%	0.0%	0.0%	16.7%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	20.0%	7.7%	0.0%	0.0%	0.0%	13.3%
다양한 이탈 청소년	10.0%	15.4%	0.0%	0.0%	0.0%	11.7%
물질주의 개인주의 증가	8.3%	7.7%	25.0%	0.0%	0.0%	8.3%
스마트 미디어 확산	6.7%	3.8%	0.0%	0.0%	0.0%	5.0%

청소년 환경 요소별의 중요성 평가에 있어 1위와 2위, 3위간의 우선순위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의원이 1순위로 선정한 환경요소에는 3점, 2순위 선정 요소에는 2점, 3순위 선정요소에는 1점씩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 각 청소년환경 요소별로 최대 평균 3점에서 최소 0점 사이의 가중치 분포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으나 그 우선순위 내에서 정당간 가중치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소년환경으로 선정한 반면(평균 1.32점),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평균 1.25점).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이 양극화 및 빈곤문제(.98점)와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의 문제(.67점)를 더 중시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62점) 문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청년고용 불안정 문제와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문제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각각 1.5점).

표 5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결과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전체
청년 고용 불안	1.08	1.02	1.50	1.50	1.50	1.08
입시경쟁과 사교육	0.90	1.25	1.00	1.00	0.00	1.04
청소년 폭력 및 유해환경	1.32	0.75	0.50	0.50	0.00	1.01
양극화와 빈곤가정 청소년	0.60	0.98	1.00	1.50	1.50	0.81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0.32	0.67	1.50	0.00	1.50	0.53
저출산과 고령화	0.62	0.25	0.00	1.00	0.00	0.43
이혼/가족붕괴, 가족돌봄 약화	0.27	0.25	0.00	0.50	1.50	0.28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	0.32	0.13	0.00	0.00	0.00	0.22
다문화 청소년 증가	0.18	0.27	0.00	0.00	0.00	0.21
다양한 이탈 청소년	0.18	0.25	0.00	0.00	0.00	0.20
물질주의 개인주의 증가	0.12	0.12	0.50	0.00	0.00	0.13
스마트 미디어 확산	0.10	0.06	0.00	0.00	0.00	0.08



[그림 2] 정당간 청소년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차이

2) 청소년 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결과

제19대 국회의원들이 평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별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이나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인력 처우개선 등의 정책안건은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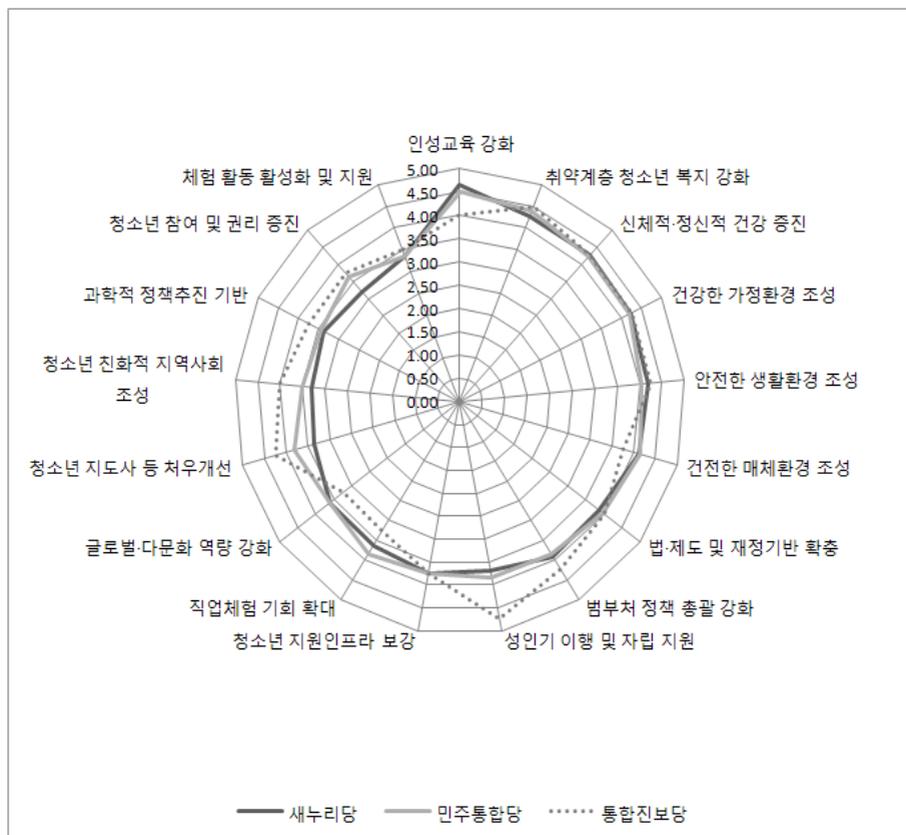
표 6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결과 (전체 순위)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전체
인성교육 강화	4.67	4.50	4.00	4.50	3.50	4.55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	4.28	4.38	4.50	4.00	4.00	4.33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4.28	4.21	4.25	4.00	3.50	4.23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4.23	4.21	4.25	4.50	3.50	4.2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20	4.04	4.25	4.00	3.50	4.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4.13	4.15	3.75	4.50	3.00	4.12
법·제도 및 재정기반 확충	3.85	3.98	4.00	4.00	4.00	3.92
범부처 정책 총괄 강화	3.92	3.85	4.25	3.50	4.00	3.89
성인기 이행 및 자립 지원	3.68	3.83	4.75	3.50	3.50	3.78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3.75	3.75	3.75	3.00	3.50	3.73
직업체험 기회 확대	3.63	3.87	3.25	3.00	3.50	3.71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60	3.62	3.25	3.50	3.00	3.58
청소년 지도사 등 처우개선	3.35	3.81	4.25	3.50	3.50	3.58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30	3.52	4.00	3.50	3.50	3.43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3.37	3.44	3.75	3.50	3.00	3.4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3.20	3.63	3.75	3.50	3.00	3.41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3.35	3.37	3.50	3.50	3.50	3.37

* 최하 1점, 최고 5점

정책안건별 시급성의 평가에 있어서도 소속정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에 가장 큰 방점을 둔 반면(4.67점), 청소년 지도사등의 처우개선 문제(3.35점)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3.2점)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직업체험 기회 확대 정책의 시급성을 다른 당들에 비해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3.87 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에 대한 시급성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3.63점). 통합진보당은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의 시급성을 나머지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4.75점), 청소년 지도사등 청소년 인력의 처우개선 정책(4.25점),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4점),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3.75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3.75점) 등에 있어서 나머지 당들에 비해 시급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림 3] 정책안건별 시급성 평가점수의 정당간 비교 결과

3) 기타 정책의견 분석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 제시하지 못한 청소년 정책 안건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안건에 대한 자유응답을 받았다. 조사에 참여한 12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모두 45명이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21명, 민주통합당 의원 21명, 통합진보당 의원 2명, 무소속의원 1명이었다. 자유롭게 개진한 의견들을 주제별로 요약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제시된 정책안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강화정책으로서 새누리당 의원 5명, 민주통합당 의원 4명이 이에 대한 정책안건을 제시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활동에 있어 바우처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정책을 제안한 의원이 역시 9명(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4명)이었다. 인성교육 중심의 학제개편이나 교육과정 및 기관을 다변화하는 등의 교육정책 개편에 관련된 정책제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4명씩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고용안정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 제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3명씩 제안하였다. 다문화배경 청소년이나 농어촌, 취약계층 청소년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 맞는 지원정책을 제안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4명, 새누리당 2명이었다. 반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안건을 제안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없었던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인터넷 중독치료(새누리당 1명, 민주통합당 1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정책(새누리당 2명), 청소년들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은 2명의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안했다.

이들 정책의견 중에는 문항별 의견을 묻는 목록과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주제들이 기타 의견을 통해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체험활동 확대 정책이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기타 의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되었다.

표 7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내용 요약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계
학교폭력 대책 강화	5	4		9
방과후 학교,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 체험 활동 확대	5	4		9
학제개편, 인성교육, 교육과정 다변화	4	4		8
청소년 노동권, 고용안정성, 최저임금 보장	3	3		6
다문화, 농어촌, 취약계층 등 특수환경 청소년 지원	2	4		6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정치참여 확대		2	2	4
인터넷 중독 치료	1	1		2
청소년 유해환경	2			2
청소년 생활문화공간 조성		2		2

4. 요약 및 논의

이상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19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는 5대 청소년 환경 요인을 순서대로 제시하자면 첫 번째는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성인이 이행 지연 문제였고, 입시경쟁 심화 및 사교육 문제가 두 번째,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문제와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현상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가정 청소년의 증가 현상, 다섯 번째는 청소년의 낮은 행복과 삶의 질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중 40% 이상이 이들 5가지 환경 요인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 정책 안건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평가한 안건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정 개편,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 및 지원 강화정책,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순이었다. 이들 안건의 시급성은 5점 만점에서 평균 4점 이상을 얻었다.

그러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청소년 환경 요인의 우선순위 평가와 정책안건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 문제를 중시한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았다.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들은 청년고용불안정 문제와 낮은 행복도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청소년 관련 정책안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정책을 시급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청소년 지도사등의 처우개선 정책이나 청소년 참여권 증진 정책의 시급성은 낮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청소년 직업체험 확대 정책과 청소년 참여권 증진 정책의 시급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통합진보당은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 청소년 지도사 처우개선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의 시급성을 높이 평가했다.

청소년 환경 및 실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제19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청소년 생활환경 및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향후 각 정당의 청소년관련 문제제기와 법안 등의 추진에 있어 바람직한 합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된 문제 현상들 중심으로 시급성이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한 가장 시급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청소년정책을 교육과 육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소년 실태라 지적되었던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이나 ‘청소년 삶의 질 저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인 ‘청소년 생활환경의 개선 정책’의 시급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강화나 청소년 지도사등의 청소년관련 인력 처우개선 문제가 뒤로 밀려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을 위해서는 본원을 비롯한 청소년정책연구기관과 정책실무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추진의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참고 1.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제19대 국회의원 의견 조사결과표

문항 1) 차기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 (1순위)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13 (10.83)	9 (15.00)	4 (7.69)	0 (0.00)	0 (0.00)	0 (0.00)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 (0.83)	1 (1.67)	0 (0.00)	0 (0.00)	0 (0.00)	0 (0.00)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27 (22.50)	12 (20.00)	12 (23.08)	1 (25.00)	1 (50.00)	1 (50.00)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24 (20.00)	9 (15.00)	14 (26.92)	1 (25.00)	0 (0.00)	0 (0.00)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27 (22.50)	20 (33.33)	7 (13.46)	0 (0.00)	0 (0.00)	0 (0.00)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13 (10.83)	3 (5.00)	8 (15.38)	1 (25.00)	1 (50.00)	0 (0.00)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1 (9.17)	4 (6.67)	5 (9.62)	1 (25.00)	0 (0.00)	1 (50.00)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2 (1.67)	1 (1.67)	1 (1.92)	0 (0.00)	0 (0.00)	0 (0.00)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	2 (1.67)	1 (1.67)	1 (1.92)	0 (0.00)	0 (0.00)	0 (0.00)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전 체	120 (100)	60 (100)	52 (100)	4 (100)	2 (100)	2 (100)

문항 1) 차기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 (2순위)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3 (2.50)	2 (3.33)	0 (0.00)	0 (0.00)	1 (50.00)	0 (0.00)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9 (7.50)	4 (6.67)	4 (7.69)	0 (0.00)	0 (0.00)	1 (50.00)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5 (4.17)	3 (5.00)	2 (3.85)	0 (0.00)	0 (0.00)	0 (0.00)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15 (12.50)	10 (16.67)	4 (7.69)	1 (25.00)	0 (0.00)	0 (0.00)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19 (15.83)	9 (15.00)	9 (17.31)	0 (0.00)	1 (50.00)	0 (0.00)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16 (13.33)	8 (13.33)	7 (13.46)	1 (25.00)	0 (0.00)	0 (0.00)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23 (19.17)	11 (18.33)	11 (21.15)	0 (0.00)	0 (0.00)	1 (50.00)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3 (2.50)	2 (3.33)	1 (1.92)	0 (0.00)	0 (0.00)	0 (0.00)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0 (8.33)	1 (1.67)	8 (15.38)	1 (25.00)	0 (0.00)	0 (0.00)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6 (5.00)	3 (5.00)	3 (5.77)	0 (0.00)	0 (0.00)	0 (0.00)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	6 (5.00)	5 (8.33)	1 (1.92)	0 (0.00)	0 (0.00)	0 (0.00)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5 (4.17)	2 (3.33)	2 (3.85)	1 (25.00)	0 (0.00)	0 (0.00)
전 체	120 (100)	60 (100)	52 (100)	4 (100)	2 (100)	2 (100)

문항 1) 차기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 (3순위)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7 (5.83)	6 (10.00)	1 (1.92)	0 (0.00)	0 (0.00)	0 (0.00)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2 (10.00)	5 (8.33)	5 (9.62)	0 (0.00)	1 (50.00)	1 (50.00)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15 (12.50)	5 (8.33)	10 (19.23)	0 (0.00)	0 (0.00)	0 (0.00)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19 (15.83)	9 (15.00)	9 (17.31)	1 (25.00)	0 (0.00)	0 (0.00)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15 (12.50)	9 (15.00)	5 (9.62)	1 (25.00)	0 (0.00)	0 (0.00)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8 (6.67)	3 (5.00)	4 (7.69)	0 (0.00)	1 (50.00)	0 (0.00)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12 (10.00)	5 (8.33)	5 (9.62)	1 (25.00)	0 (0.00)	1 (50.00)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3 (2.50)	2 (3.33)	1 (1.92)	0 (0.00)	0 (0.00)	0 (0.00)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0 (8.33)	5 (8.33)	4 (7.69)	1 (25.00)	0 (0.00)	0 (0.00)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6 (5.00)	2 (3.33)	4 (7.69)	0 (0.00)	0 (0.00)	0 (0.00)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	8 (6.67)	6 (10.00)	2 (3.85)	0 (0.00)	0 (0.00)	0 (0.00)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5 (4.17)	3 (5.00)	2 (3.85)	0 (0.00)	0 (0.00)	0 (0.00)
전 체	120 (100)	60 (100)	52 (100)	4 (100)	2 (100)	2 (100)

문항 2) 차기정부(2013~2017년) 핵심 청소년 정책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4.55	4.67	4.50	4.00	4.50	3.50
2.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4.33	4.28	4.38	4.50	4.00	4.00
3.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4.23	4.28	4.21	4.25	4.00	3.50
4.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4.22	4.23	4.21	4.25	4.50	3.50
5.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4.12	4.13	4.15	3.75	4.50	3.00
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2	4.20	4.04	4.25	4.00	3.50
7.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3.92	3.85	3.98	4.00	4.00	4.00
8.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3.89	3.92	3.85	4.25	3.50	4.00
9.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3.78	3.68	3.83	4.75	3.50	3.50
10.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3.73	3.75	3.75	3.75	3.00	3.50
11.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3.71	3.63	3.87	3.25	3.00	3.50
12.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3.58	3.35	3.81	4.25	3.50	3.50
13.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58	3.60	3.62	3.25	3.50	3.00
14.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43	3.30	3.52	4.00	3.50	3.50
15.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3.41	3.20	3.63	3.75	3.50	3.00
16.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3.41	3.37	3.44	3.75	3.50	3.00
17.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3.37	3.35	3.37	3.50	3.50	3.50

문항 2-1)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0 (0.00)	1 (1.67)	18 (30.00)	41 (68.33)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8 (15.38)	10 (19.23)	34 (65.38)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2 (50.00)	0 (0.00)	2 (5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0 (0.00)	12 (10.00)	30 (25.00)	78 (65.00)	120 (100)

문항 2-2)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0 (0.00)	7 (11.67)	29 (48.33)	24 (40.00)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6 (11.54)	20 (38.46)	26 (50.00)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0 (0.00)	2 (50.00)	2 (5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0 (0.00)	2 (1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2 (100)
전 체	0 (0.00)	0 (0.00)	14 (11.67)	53 (44.17)	53 (44.17)	120 (100)

문항 2-3)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0 (0.00)	7 (11.67)	29 (48.33)	24 (40.00)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11 (21.15)	19 (36.54)	22 (42.31)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1 (25.00)	1 (25.00)	2 (5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0 (0.00)	21 (17.50)	50 (41.67)	49 (40.83)	120 (100)

문항 2-4)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0 (0.00)	10 (16.67)	26 (43.33)	24 (40.00)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10 (19.23)	21 (40.38)	21 (40.38)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1 (25.00)	1 (25.00)	2 (5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0 (0.00)	22 (18.33)	50 (41.67)	48 (40.00)	120 (100)

문항 2-5)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2 (3.33)	8 (13.33)	30 (50.00)	20 (33.33)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2 (3.85)	10 (19.23)	18 (34.62)	22 (42.31)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2 (50.00)	1 (25.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
무소속	0 (0.00)	1 (50.00)	0 (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5 (4.17)	20 (16.67)	51 (42.50)	44 (36.67)	120 (100)

문항 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0 (0.00)	10 (16.67)	28 (46.67)	22 (36.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12 (23.08)	26 (50.00)	14 (26.92)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0 (0.00)	3 (75.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0 (0.00)	24 (20.00)	58 (48.33)	38 (31.67)	120 (100)

문항 2-7)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0 (0.00)	18 (30.00)	33 (55.00)	9 (15.00)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13 (25.00)	27 (51.92)	12 (23.08)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1 (25.00)	2 (50.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0 (0.00)	2 (1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0 (0.00)	2 (100)	0 (0.00)	2 (100)
전 체	0 (0.00)	0 (0.00)	32 (26.67)	66 (55.00)	22 (18.33)	120 (100)

문항 2-8)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3 (5.00)	17 (28.33)	22 (36.67)	18 (30.00)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4 (7.69)	12 (23.08)	24 (46.15)	12 (23.08)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0 (0.00)	3 (75.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0 (0.00)	2 (100)	0 (0.00)	2 (100)
전 체	0 (0.00)	7 (5.83)	30 (25.00)	52 (43.33)	31 (25.83)	120 (100)

문항 2-9)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3 (5.00)	21 (35.00)	28 (46.67)	8 (13.33)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20 (38.46)	21 (40.38)	11 (21.15)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0 (0.00)	1 (25.00)	3 (7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3 (2.50)	43 (35.83)	52 (43.33)	22 (18.33)	120 (100)

문항 2-10)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2 (3.33)	18 (30.00)	33 (55.00)	7 (11.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1 (1.92)	20 (38.46)	22 (42.31)	9 (17.31)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2 (50.00)	1 (25.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2 (100)	0 (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3 (2.50)	43 (35.83)	57 (47.50)	17 (14.17)	120 (100)

문항 2-11)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1 (1.67)	3 (5.00)	20 (33.33)	29 (48.33)	7 (11.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2 (3.85)	13 (25.00)	27 (51.92)	10 (19.23)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3 (75.00)	1 (25.00)	0 (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2 (100)	0 (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1 (0.83)	5 (4.17)	39 (32.50)	58 (48.33)	17 (14.17)	120 (100)

문항 2-12)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5 (8.33)	30 (50.00)	24 (40.00)	1 (1.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2 (3.85)	14 (26.92)	28 (53.85)	8 (15.38)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0 (0.00)	3 (75.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7 (5.83)	46 (38.33)	57 (47.50)	10 (8.33)	120 (100)

문항 2-13)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3 (5.00)	24 (40.00)	27 (45.00)	6 (10.00)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3 (5.77)	20 (38.46)	23 (44.23)	6 (11.54)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3 (75.00)	1 (25.00)	0 (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2 (100)	0 (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6 (5.00)	50 (41.67)	52 (43.33)	12 (10.00)	120 (100)

문항 2-14)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1 (1.67)	5 (8.33)	31 (51.67)	21 (35.00)	2 (3.33)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2 (3.85)	26 (50.00)	19 (36.54)	5 (9.62)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1 (25.00)	2 (50.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1 (0.83)	7 (5.83)	60 (50.00)	44 (36.67)	8 (6.67)	120 (100)

문항 2-15)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1 (1.67)	4 (6.67)	38 (63.33)	16 (26.67)	1 (1.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1 (1.92)	23 (44.23)	22 (42.31)	6 (11.54)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1 (25.00)	0 (0.00)	2 (50.00)	1 (25.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2 (100)	0 (0.00)	0 (0.00)	2 (100)
전 체	1 (0.83)	6 (5.00)	64 (53.33)	41 (34.17)	8 (6.67)	120 (100)

문항 2-16)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00)	3 (5.00)	33 (55.00)	23 (38.33)	1 (1.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4 (7.69)	25 (48.08)	19 (36.54)	4 (7.69)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1 (25.00)	3 (75.00)	0 (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2 (100)	0 (0.00)	0 (0.00)	2 (100)
전 체	0 (0.00)	7 (5.83)	62 (51.67)	46 (38.33)	5 (4.17)	120 (100)

문항 2-17)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2 (3.33)	4 (6.67)	29 (48.33)	21 (35.00)	4 (6.67)	60 (100)
민주통합당	0 (0.00)	0 (0.00)	36 (69.23)	13 (25.00)	3 (5.77)	52 (100)
통합진보당	0 (0.00)	0 (0.00)	2 (50.00)	2 (50.00)	0 (0.00)	4 (100)
자유선진당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무소속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
전 체	2 (1.67)	4 (3.33)	69 (57.50)	38 (31.67)	7 (5.83)	120 (100)

문항 2-18) 기타

정당	정책	시급성
새누리당	•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마련	매우 시급함
	• 학교 폭력 근절 방안 마련	
민주통합당	• 입시제도 개선	매우 시급함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 창의적 상상력 확대 시스템 개선	약간 시급함
	• 청소년 건전한 문화조성 환경 마련	
	• 학교교육 이외 대체교육 선택권 마련	

문항 3) 차기 정부(2013~2017년)의 핵심 청소년정책과제

구 분	내 용
새누리당	<p>〈학교폭력〉 현재 대중매체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학교나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하기 때문에 영국의 'ABC정책'(Anti Bullying Campaign)이나 노르웨이의 'Zero Program', 핀란드 'Kiva Koulu' 같은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지역사회·가정이 하나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예방 및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함.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학교폭력의 중요 구성 요소인 학교·지역사회·가정이 하나의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함.</p>
	<p>구체적 제언 수준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p>
	<p>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증원을 제안하고자 함</p>
	<p>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심각성과 관련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00방, 00룸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인·허가에 있어 1회 위반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급선무</p>
	<p>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약화되어 비만이나 우울이 늘고 있음-이에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청소년 돌봄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한 법개정에 주력해 보고자 함.</p>
	<p>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지원확대와 각종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만성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보안관 확충, 학교와 경찰력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함</p>
	<p>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p>
	<p>〈청년실업, 고용불안정 해소〉 청소년 문제는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결혼, 출산 등 연이어 지연되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성인기 이행 자체가 지연되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해소가 가장 시급한 청소년 문제로 판단되고 있음. 청소년 연령규정의 재정비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대책 마련(국가(-)청년 매칭 사업, 기업(-)청년 네트워킹 사업)에 필요한 법령 정비를 하고자 함</p>
	<p>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기업 및 공기업의 취업 설명회 강화, 현재 일부 상위권 대학에 몰리고 있는 경향, 취업기준을 학벌이 아닌 지원자의 능력으로 판단하도록 촉구, 신입사원 선발에 적극적 형태를 보이도록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에 외면하는 취업현실에 맞추어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인력풀 구성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기업의 융합을 추진</p>
	<p>학교 중도 탈락, 소년원 출신 등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 개발 및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지역(시, 군, 구) 단위 학교 및 지역 상담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함</p>
	<p>청소년들의 인성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p>
	<p>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취약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지원 확대, 지역 커뮤니티 구축(청소년 참여 가능 프로그램 확대) 등</p>

구 분	내 용
	아동, 청소년의 정신보건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개정 필요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해나가야 함. 청소년 상담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치료 인력을 확보하고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중독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가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출청소년쉼터,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육체적 혹은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 자신의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세상과 단절되고 있는 모습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과 캠페인에 노력할 것입니다.
	1.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 인증제를 연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지식전달 중심 학교교육의 단점보완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체험학습에 중점을 둔 청소년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토록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 경쟁적인 입시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신뢰성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인증제 법률을 확립해야 함을 제안) 2. "가정 양육문제, 휴대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스트레스 증대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폭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학교내 다양한 청소년 단체 활동의 긍정적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서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토록 개방하고 1학생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을 의무화 하도록 제안하고자 함."(학교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학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모든 학생이 1개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
	1. 과도한 입시제도와 학력위주의 사회 분위기 타파. 2. 물질만능 개인주의적 가치관 지양.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1. "학제 개편으로 현행 3월 입학 및 2월 졸업을 조정하여, 9월 입학 8월 졸업으로 전세계적 조류에 맞게 시기, 조절 필요!, 유학 및 학생 교류에 있어 우리식 학제 및 학기제 조절 필수!" 2. "강력한 교육개혁으로 사교육을 폐지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철폐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인성 함양을 통해 전인교육 완성 필요!"
	1. 청소년 파트타임(단기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인권, 노동권보호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 법적 보완이 필요. 2.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1.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대입 입시 연계, 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부모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 이와 함께 대학입시에서도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구 분	내 용
민주통합당	고교 졸업후부터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법제도적 지원 정책의 수립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지원체계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청소년 자살예방 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제안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1.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야 함. 2.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자기에게 있는 다양한 능력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 예) 재능기부 등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시 특기 활동 등으로 extra 포인트를 허용해 청소년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함. 꼭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춤, 노래, 컴퓨터)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1.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증가하는 청소년범죄율,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적, 심신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 육성이 필요함. 2.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전체의 1%가량에 불과하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건장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대한민국에 청소년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꿈에 대한 창의력, 직업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든 것 같다. 7~80년대처럼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초연지기와 꿈의 크기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대체도 불가하다. '놀토'를 아이들에 자연의 초연지기, 꿈,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교육과정에 '놀토'를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을 믿을 그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유흥업소는 연령 제한 때문에, 일반 놀이 시설 등은 유아들이 가는 곳으로 분류됨으로써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음. 동네 놀이터, 골목길, 빈집, 주차장 등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열린 공간 조성이 필요, 단, 계몽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은 제발 지양
	청소년 할인, 문화 교육 혜택 및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사회와 연관된 기여 활동시 포인트를 주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문화 교육 역시 시급함.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 청소년기에 인생 계단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지난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1사1촌운동'은 기업 하나가 마을 하나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위 운동을 본따 '1교(校) 1교(教) 운동'을 제안해 보고자 함. 즉 1개의

구 분	내 용
	<p>학교와 인근 1개의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이 하나로 묶여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p> <p>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자금 성격의 기금조성(단순지원이 아닌 청년빈곤층 최소화) 1) 대기업 펀드 및 국가, 지자체 예산→재원조달 검토, 2) 조건부 지원→구직, 창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활동 등 기준안 마련</p> <p>핵심임제: 청소년을 관리의 주체가 아닌 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p> <p>학교교육 이외 대응하는 교육장 마련</p> <p>청소년들의 교육과정 다변화를 통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교육강화 - 직업, 학교, 이념 등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적, 질적 강화</p> <p>1.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 및 참여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 추진. 2.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p> <p>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공제회 부담 등을 통한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p> <p>사회 양극화에 따른 청소년 빈곤문제로 인해 청소년 폭력, 학교 중도탈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피부양자조건을 완화하고 개별급여 실시 및 차상위 지원방안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1. 20세~24세 무렵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장기 계획을 수립(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연령 규정을 30세로 늦추는 것에는 반대) 2.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직업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예, 운전면허 취득) 3. 선거 연령 하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최소 양식 함양 필요</p> <p>1.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의 전국적 확대, 대학 등록금 정상화(반값등록금)를 통한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및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 취업의 안정성 모색을 위한 제반 규정을 개정함. 2. 청소년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각 분야에서 꿈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각 분야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함.</p> <p>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주5일수업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가출청소년 쉼터 조성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지원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육성 기금 안정화 정책 시행.</p> <p>*학교폭력 대책 관련 법안 추진, 관련 예산 확충, 1)학교폭력, 신체에 위해 가하는 범죄적 성격 국한, 정신적 고통 유발할 수 있는 광의적 행위로 확대, 2)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책무 강화(예방활동, 연수의무 실시 등), 3)자발적인 폭력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또래 조정 상담제' 등 실시, 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등, 4)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5)학교폭력 은폐, 축소 교원 징계 강화, 6)학교폭력 상담전문인력 확충 및 재원 마련</p>
통합진보당	<p>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p> <p>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19세에서 18세로</p>
무소속	<p><제안의제> 1.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및 법규 제정 필요. 2. 다문화 가정 및 결손 청소년 가정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 필요</p>

참고 2. 국회의원 의견조사지 원문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입법부의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에 보내주신 의원님의 의견은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조사보고서의 자료로 익명으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2.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담당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박사 / 장근영 박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 02-2188-8880/e-mail: kihuns@nypi.re.kr)

<<조사담당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장대홍 팀장 / 문옥영 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152-719)
(☎ 02-6011-8005/e-mail: jjangdae@ksdc.re.kr)

1. 차기 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

다음에 제시한 사회 환경변화 및 청소년 실태 중에서 차기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과 목표 수립에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세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순위에 맞게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청소년(9~24세) 인구 구성비: '80년 36.8% → '12년 20.4% → '30년 13.7%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이혼가구: '90년 17만 가구 → '10년 127만 가구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한국의 외국인 거주 증가율: '05년 53만 명 → '11년 126만 명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 '05년 6,121명 → '11년 36,676명 증가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대기업 입직연령: '98년 남26세, 여23.5세 → '09년 남28.7세, 여25.6세
초혼연령: '01년 남 29.5세 여 26.8세 → '11년 남 31.9세, 여 29.1세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우리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학교폭력 피해율: '09년 9.4% → '10년 11.8% → '11년 18.3%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상대빈곤율: '89년 8.6% → '99년 12.4% → '10년 14.9%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률: '07년 68.2% → '10년 88.8%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1년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09년 64.3점, '10년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11년 고교생 3만8787명이 중도탈락, 초·중·고 전체로는 7만6489명이 중도탈락
'99년 청소년 가출경험율 8.6%, '11년 13.1%로 증가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06년 11.6% → '10년 14.3%, 청소년 우울감 경험율 ('05)29.9% → ('10) 37.4%
'10년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 1위 13% 고의적 자해(자살)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청소년들은 교육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 뚜렷, 노스페이스 등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 확대

13. 기타 _____

2. 차기 정부(2013~2017년) 핵심 청소년정책

다음에 제시한 각각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 정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 관련 정책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2-1.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1	2	3	4	5
2-2.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1	2	3	4	5
2-3.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1	2	3	4	5
2-4.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1	2	3	4	5
2-5.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1	2	3	4	5
2-6.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1	2	3	4	5
2-7.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1	2	3	4	5
2-8.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1	2	3	4	5
2-9.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	2	3	4	5
2-1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2	3	4	5
2-11.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1	2	3	4	5
2-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1	2	3	4	5
2-13.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1	2	3	4	5
2-14.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1	2	3	4	5
2-15.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1	2	3	4	5
2-16.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1	2	3	4	5
2-17.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1	2	3	4	5
2-18. 기타 _____	1	2	3	4	5

3. 차기 정부(2013~2017년)의 핵심 청소년정책과제

14차기 정부(2013~17년)의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핵심 청소년정책 과제에 대한 응답 내용을 고려하여 법률 제·개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1>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규정을 24세에서 30세로 확대해 청년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대부분 국가들의 선거연령을 고려해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작성 예시 2>

“청소년 할인제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바우처, 학생증, 청소년증 등 각종 할인혜택 및 지원을 통합하고 봉사활동, 사회기부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카드 제도(영국 Opportunity card, 스코틀랜드의 Young Scot Card 등)를 제안하고자 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10%)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제도(핀란드 헬싱키시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 브라질 바라만사시의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등)를 제안하고자 함”

발표 2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

1. 서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김기현 외, 2007). 우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대신 노년층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이혼율 증가와 만혼경향으로 인해 가족구조는 이제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로 향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확산되면서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자녀, 탈북 가족의 자녀 등 다문화 청소년의 비중도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의 속도는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접어든 반면, 교육확대와 지식기반산업화, 고용 없는 성장, 군복무 등으로 인해 입직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갈수록 낮아지며, 청소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득양극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

이러한 변화의 가속화 시대에서 청소년 발달은 개인 수준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Coleman & Hendry, 2006[1999]). 즉, 저출산·고령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취업의 불확실성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가 성장해 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인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성장할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달과 위상이 결정될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래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과 준비는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역량과 번영과

직결될 것이다. 바로 그 같은 이유로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10~20년간에 걸쳐 청소년 장기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여건 조성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으로 각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청소년관련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국가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시행할 「각 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가 된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 분석과 정책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과 영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여 원활한 성인기로의 이행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간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정책 및 정책관련 자원의 집중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07년 말 수립한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08~’12)」을 시행 중이나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청소년정책이 이관된 후 2008년 「미래세대 희망플랜,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09~’13)」이, 2010년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되면서 2010년 「제4차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는데 있다.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정책사업 중 정책브랜드 사업이 가능한 경우와 새롭게 정책 브랜드화가 필요한 사업을 범부처 차원의 핵심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¹⁾.

1) 이 글은 김기현 외(2011)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청소년정책 핵심 키워드 및 SWOT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은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연구과제인 「차기정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의 일부분임.

II. 우리나라 청소년실태 및 환경 변화 분석

1. 우리나라 청소년 실태

청소년정책 수립에 있어 우선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10)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나 직업(취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15~24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선택하고 있으며 연령을 구분해서 보면 15~19세는 59.5%가 공부를, 20~24세는 직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36.9%)로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공부나 직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하고 있을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2002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이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15~19세 48.9%, 20~24세 30.8%)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결과와는 다른 부분은 19~24세의 경우 직업(8.6%)보다는 공부(30.8%)를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차이점은 공부나 직업과 같이 의무적인 생활시간과 관련된 응답 결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외모나 연예를 고민하거나 가정과 친구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외모나 용모는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가장 큰 고민거리(15~19세 18.4%, 20~24세 21.0%)로 응답하고 있으나 2010년 외모나 용모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한 청소년은 10% 초반(15~19세 12.5%, 20~24세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 역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 대학생 연령대인 20대 초반 중 10.2%가 이성교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하고 있으나 2010년 이성 교제에 관한 고민은 2.5%로 크게 감소하였다.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하거나 준비하겠다는 마음자세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표현일 수 있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감정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전자의 입장을 주로 갖든 아니면 후자의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직업과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공부의 동질성 문제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와 관련된 것이며 청소년기에 당연히 고민해야 할 미덕이자 동시에 타인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곧, 현재의 청소년들은 지긋지긋한 입시경쟁을 끝내자마자 취업 경쟁을 대비하든 회피하든 미래의 새로운 경쟁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여유와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재의 청소년들도 의견 중에 깨닫고 있는 시대 인식을 반영한다. 곧 오늘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표 1 연령대별 주관적 행복감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매우 행복	다소 행복	다소 불행	매우 불행
전체		30.5	59.6	8.8	1.1
한국	소계	12.9	74.5	11.7	0.9
	15~29세	9.4	78.0	11.5	1.0
	30~49세	15.7	72.3	11.4	0.7
	50세 이상	11.0	75.4	12.5	1.1
독일	소계	19.9	63.9	14.6	1.6
	15~29세	26.7	62.4	9.3	1.6
	30~49세	21.4	62.9	14.3	1.4
	50세 이상	15.7	65.5	17.0	1.8
미국	소계	34.4	58.8	6.4	0.4
	15~29세	36.6	60.1	3.3	-
	30~49세	30.4	60.2	9.1	0.3
	50세 이상	36.7	56.9	5.7	0.7
스웨덴	소계	43.1	53.2	3.2	0.5
	15~29세	43.2	52.4	3.4	1.0
	30~49세	46.3	49.5	3.6	0.6
	50세 이상	40.7	56.2	2.9	0.2
영국	소계	50.8	42.8	5.2	1.2
	15~29세	45.3	51.5	2.5	0.7
	30~49세	51.1	41.7	6.4	0.8
	50세 이상	53.6	39.0	5.5	1.9
일본	소계	29.2	60.5	9.2	1.1
	15~29세	30.1	59.1	8.5	2.3
	30~49세	27.2	60.8	11.4	0.5
	50세 이상	30.2	60.8	7.8	1.1

구분		매우 행복	다소 행복	다소 불행	매우 불행
프랑스	소계	36.4	54.0	7.6	1.9
	15~29세	45.9	51.8	1.1	1.2
	30~49세	38.1	54.0	6.3	1.6
	50세 이상	30.9	54.9	11.6	2.5
핀란드	소계	29.6	62.6	6.7	1.2
	15~29세	37.8	58.9	3.3	-
	30~49세	33.8	59.0	5.4	1.8
	50세 이상	22.1	67.5	9.3	1.1

자료 : The World Values Survey, 『Values Survey Databank』, 2011.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어떤 수준인지를 2011년도에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연령세대를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15~29세의 결과를 토대로 젊은 세대의 행복감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2 청소년 지적 역량 수준 국제비교 결과

(단위 : %)

국가명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과학 소양		ICT 소양		전체	
	평균	B 점수	평균	B 점수	평균	B 점수	평균	B 점수	B 평균	순위
호주	515	0.73	514	0.74	527	0.75	52.34	0.77	0.75	4
오스트리아	470	0.23	496	0.60	494	0.44	59.41	0.93	0.55	20
벨기에	506	0.63	515	0.75	507	0.56	49.72	0.71	0.67	10
캐나다	524	0.83	527	0.85	529	0.77	51.25	0.75	0.80	3
칠레	449	0.00	421	0.00	447	0.00	26.46	0.21	0.05	29
체코	478	0.32	493	0.58	500	0.50	55.27	0.84	0.56	18
덴마크	495	0.51	503	0.66	499	0.49	48.68	0.69	0.59	17
에스토니아	501	0.58	512	0.73	528	0.76	51.65	0.76	0.70	8
핀란드	536	0.97	541	0.96	554	1.00	37.97	0.46	0.85	1

국가명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과학 소양		ICT 소양		전체	
	평균	B 점수	평균	B 점수	평균	B 점수	평균	B 점수	B 평균	순위
독일	497	0.53	513	0.74	520	0.68	49.86	0.72	0.67	9
그리스	483	0.38	466	0.36	470	0.21	33.85	0.37	0.33	26
헝가리	494	0.50	490	0.55	503	0.52	46.74	0.65	0.56	19
아이슬란드	500	0.57	507	0.69	496	0.46	47.01	0.66	0.59	16
아일랜드	496	0.52	487	0.53	508	0.57	40.95	0.52	0.54	21
이스라엘	474	0.28	447	0.21	455	0.07	34.43	0.38	0.24	27
이탈리아	486	0.41	483	0.50	489	0.39	44.53	0.60	0.48	24
일본	520	0.79	529	0.86	539	0.86	17.01	0.00	0.63	12
대한민국	539	1.00	546	1.00	538	0.85	40.63	0.52	0.84	2
네덜란드	508	0.66	526	0.84	522	0.70	50.90	0.74	0.73	6
뉴질랜드	521	0.80	519	0.78	532	0.79	43.93	0.59	0.74	5
노르웨이	503	0.60	498	0.62	500	0.50	53.87	0.81	0.63	11
폴란드	500	0.57	495	0.59	508	0.57	48.92	0.70	0.61	14
포르투갈	489	0.44	487	0.53	493	0.43	62.78	1.00	0.60	15
슬로바키아	477	0.31	497	0.61	490	0.40	42.25	0.55	0.47	25
슬로베니아	483	0.38	501	0.64	512	0.61	54.15	0.81	0.61	13
스페인	481	0.36	483	0.50	488	0.38	48.09	0.68	0.48	23
스웨덴	497	0.53	494	0.58	495	0.45	41.47	0.53	0.53	22
스위스	501	0.58	534	0.90	517	0.65	50.96	0.74	0.72	7
터키	464	0.17	445	0.19	454	0.07	22.19	0.11	0.13	28
최대값	539	1.00	546	1.00	554	1.00	62.78	1.00	0.85	
최소값	449	0.00	421	0.00	447	0.00	17.01	0.00	0.05	
전체평균	496.10		498.93		503.93		45.08		0.57	

주 : ICT 조사에 참여한 29개 국가의 결과임.

자료 : OECD, The PISA International Database (<http://pisa2009.acer.edu.au/>).

출처 : 김기현 외(2010). 이 연구는 2006년 PISA 결과를 사용했으나 여기에서는 최근 자료인 2009년 PISA 결과를 사용함.

표 3 청소년 사회적 역량 수준 국제비교 결과

(단위 : %)

국가명	신뢰/태도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체	
	평균	B점수	평균	B점수	평균	B점수	B점수 평균	순위
호주	59.10	0.51	43.00	0.90	503.00	0.41	0.52	4
벨기에	52.00	0.18	41.50	0.85	514.00	0.50	0.47	10
칠레	68.50	0.96	40.00	0.81	483.00	0.25	0.52	4
체코	50.40	0.10	21.00	0.24	510.00	0.47	0.31	21
덴마크	50.60	0.11	24.00	0.33	576.00	1.00	0.45	15
영국	58.00	0.46	42.50	0.88	519.00	0.54	0.53	2
에스토니아	57.30	0.43	29.50	0.49	525.00	0.59	0.44	16
핀란드	52.00	0.18	17.00	0.12	576.00	1.00	0.42	18
그리스	63.40	0.72	29.00	0.48	476.00	0.19	0.38	19
아일랜드	61.90	0.64	46.50	1.00	534.00	0.66	0.60	1
이탈리아	68.60	0.96	23.50	0.31	531.00	0.64	0.50	8
대한민국	48.30	0.00	13.00	0.00	565.00	0.91	0.31	21
룩셈부르크	58.60	0.49	40.00	0.81	473.00	0.17	0.44	16
멕시코	69.40	1.00	45.00	0.96	452.00	0.00	0.51	7
뉴질랜드	58.30	0.47	43.50	0.91	517.00	0.52	0.53	2
노르웨이	55.40	0.34	36.00	0.69	515.00	0.51	0.47	10
폴란드	56.20	0.37	41.50	0.85	536.00	0.68	0.52	4
슬로바키아	62.20	0.66	26.50	0.40	529.00	0.62	0.46	13
슬로베니아	59.90	0.55	34.00	0.63	516.00	0.52	0.47	10
스페인	64.70	0.78	29.00	0.48	505.00	0.43	0.46	13
스웨덴	55.30	0.33	18.50	0.16	537.00	0.69	0.38	19
스위스	52.00	0.18	37.50	0.73	531.00	0.64	0.48	9
최대값	69.40	1.00	46.50	1.00	576.00	1.00	0.60	
최소값	48.30	0.00	13.00	0.00	452.00	0.00	0.31	
전체평균	58.28		32.82		519.23		0.46	

주 : IEA의 2009년 ICSS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OECD 가입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 Schulz et al. (2010)
 출처 : 김기현 외(2010)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에 대해서 한국의 15~29세는 9.4%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독일은 26.7%, 미국은 36.6%, 스웨덴은 43.2%, 영국은 45.3%, 일본은 30.1%, 프랑스는 45.9%, 핀란드는 37.8%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행복감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연령세대 중 행복감에 있어서 15~29세 청년층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지 살펴보면,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과 더불어 영국만이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에 있어서 청년층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오히려 청년층의 행복감이 다른 연령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김기현 외(2010)는 OECD의 PISA와 IEA의 ICCS 자료를 이용하여 Bonnet et al.(2003)이 고용의 질(Quality of Work Life) 지수개발에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여 OECD의 DeSeCo(Rychen and Salganik, 2003)에서 설정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국제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2011년에 발표된 OECD PISA 2009의 결과로 보정해 청소년들의 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 역량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독일, 벨기에 등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ICT 소양은 예상과는 달리 최상위권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OECD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9개 국가 중 한국은 23위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2위), 체코(3위) 등과 같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CT 소양에 대한 측정이 인터넷 등의 사용량이나 사용시간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효능감을 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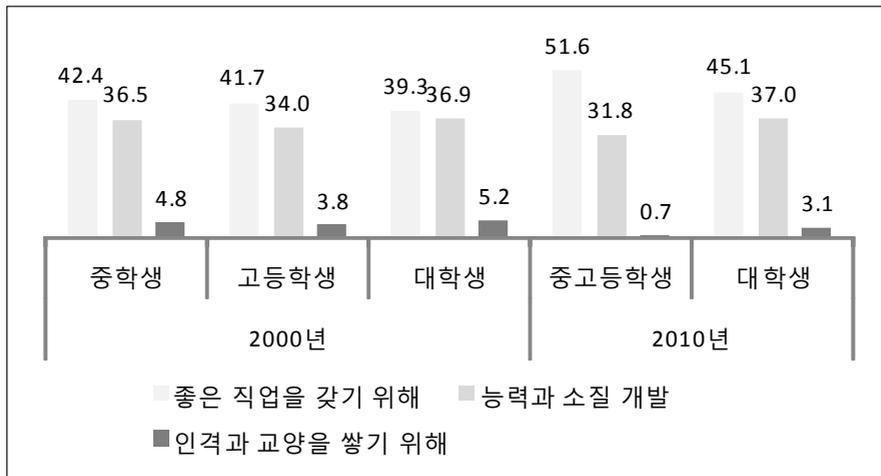
사회적 역량 지표의 경우는 지적 역량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수준은 22개 OECD 국가 중에서도 공동 21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관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식수준의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관계지향성(시민참여)이나 사회적 협력(신뢰/태도)에 해당하는 수치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살펴보기 전에 운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운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국은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0.5%로 다른

국가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먼저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비만율은 2006년 11.6%에서 2010년 14.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도비만 학생의 비중도 1.3%로 '06년에 비해 0.5%p 증가하여 지속적인 비만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1).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2005년 29.9%에서 2010년 37.4%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도 2008년 56.5%에서 2010년 6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점차 개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는 것과는 달리 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되고 있으며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시하는 도구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은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응답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교육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인격을 쌓고 교양을 높이는 것보다는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교육 그 자체의 목표보다는 취업을 위한 도구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대학이나 기업이 학생 및 구직자를 선발하거나 채용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decent work)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학벌 위주로 출신대학을 중시하고 성적이나 점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역시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목 위주의 성적과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김기현 외, 2009). 이는 인격 형성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과 같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 수준에 있어서 불균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그림 1] 청소년들의 기대 교육 목적(2000/2010)

다음으로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강영배·김기현(2008)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직업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단어를 명사와 형용사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직업과 관련한 명사형 응답에서 ‘돈’(11명, 22.4%)이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직업명(예를 들어, 약사, 호텔매니저, 회사원, PD 등)이 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을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직업과 관련하여 ‘감옥’이 연상될 정도로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형용사로는 ‘힘들다’(7명), ‘어렵다’(5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확실하다’, ‘막막하다’, ‘짜증난다’, ‘조급하다’ 등과 같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대학생들은 직업을 ‘독립적’이며, ‘즐겁고’, ‘보람찬’ 활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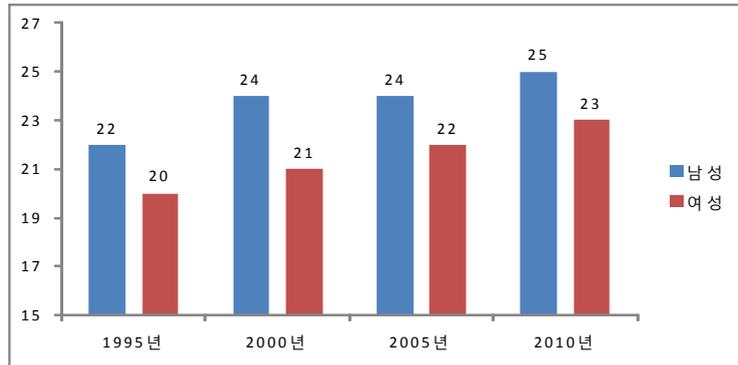
이러한 직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점차 취업이 불확실해지고 청년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 역시 물질·경제적 대가를 우선시하는 측면, 곧 일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을 통한 보람이나 자기충족을 추구하는 측면, 곧 일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상진(2004)은 교육학적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성적욕구에 따른 이성교제를 유예하는 대신 미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습득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사회와 청소년간의 암묵적 약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늦어진다면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

이러한 유예 상황은 생애과정적 시각(life course perspectives)에서 볼 때 ‘청소년 → 성년 → 노년’으로 이어지는 생활사가 각각 ‘교육 → 노동 → 여가’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입장에 대한 전환을 요구한다(김기현, 2003). 이에 대해 남춘호(2005)는 학습기, 취업기, 노후여가라는 연령분절적 체제는 점차 모호해 지며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연령통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으며 더더군다나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청소년들은 현재의 삶에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있는가에 대한 관점 역시 이후의 삶에 저당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인기로의 이행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성인기 이행시점의 지연과 청소년기의 연장현상은 대부분의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늦은 성인기의 시작은 결혼과 다음 세대의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성인기 이행의 지연은 입직연령 연장과 결혼연령의 연장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 : 연령대 중 처음으로 고용률 50%를 넘는 연령을 첫 일자리 진입연령으로 산정함.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도별 남성과 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연령

국제적인 관행으로 볼 때 첫 일자리 진입에 대한 연령은 언제 처음으로 취업했는지를 질문하는 직접적 방식과 특정 년도에 고용률이 50%를 넘는 나이를 평균적인 첫 일자리 진입연령으로 간주하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 측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매년 5월마다 직접적 방식의 첫 일자리 진입년도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조사는 조사 연혁이 짧아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첫 일자리 진입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률 50%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연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성은 1995년 22세에서 2010년 25세로 일자리 진입이 3세 늦어졌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20세에서 23세로 이 역시 3세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입직 연령과 관련하여 고용정보업체인 인크루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8년 남자 26세, 여자 23.5세에서 2009년에는 남자 28.7세, 여자 25.6세로 각각 2.7세와 2.1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인크루트, 2009).

고학력 등에 따른 늦은 입직은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 초혼 연령은 1990년에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00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각각 1.6세와 1.7세 증가했으며 연령증가세는 계속되어 2003년에는 남자의 초혼연령이 30.14세로 처음 평균 30세를 넘어섰고(여자는 27.2세), 이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되어 2010년에는 남자평균 초혼 연령이 31세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남자 31.8세, 여자 28.9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늦은 결혼은 결국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은 통계청의 출산연령 데이터가 처음 저장된 1993년에는 27.5세였으나 2000년에는 29.2세로, 2005년에는 마침내 30.2세

로 평균 30세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31.26세에 이르렀다. 이 평균출산연령이 늦둥이의 출산으로 인한 평균연령의 증가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첫아이 출산연령도 평균출산연령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첫아이 출산연령을 따로 기록한 2003년부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첫아이 출산연령은 28.5세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30.1세로 처음으로 30세를 넘겼다. 7년 사이에 1.53세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초혼연령은 평균 32.3세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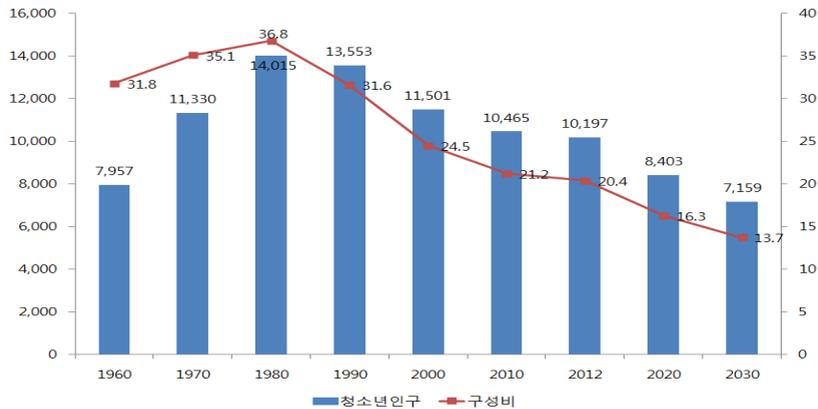
표 4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단위 : 세)

구 분	남 성(A)	여 성(B)	남녀차이(A-B)
1990	27.8	24.8	3.0
1995	28.4	25.3	3.0
2000	29.3	26.5	2.8
2005	30.9	27.7	3.2
2010	31.8	28.9	2.9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다음으로 현재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뚜렷한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우리나라는 결혼연령 상승·자녀출산 기피 등으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으며 평균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26명으로 2006년의 1,123명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세계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 171명으로 1980년(87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통계청사회통계국, 2010). 한편,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상승하였고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에서 2020년에는 782만 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그림 3] 연도별 청소년인구 비율의 변화 추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6.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1.3%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해서 2030년에는 2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노동인구의 비율은 2006년의 1대 7.6명에서 2030년에는 1대 2.7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도 향후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가족규모가 감소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80년 4.62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감소했으며 이혼가구는 1990년 17만 가구에서 2010년 127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조손가정도 2000년 4만5천225 가구에서 2010년 6만9천175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뚜렷한 부분은 지나친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의 결핍이다. 청소년(10~24세)의 평일 24시간 중에서 운동에 쓰는 시간은 1999년의 14분 36초에서 2009년에는 12분 4초로 2분 28초 감소했다. 특히 해당기간에 단체스포츠 운동시간이 9분 4초에서 6분 18초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주5일 수업제 부분도입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사교육시간의 증가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전에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던 토요일 사교육시간이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증가하여 토요일휴업에 따른 여유시간이 사교육시간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OECD 가입국들 중 최고 수준이다. 2004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15~24세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4시간 55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대상 국가 두 번째로 긴 학습시간을 보여준 미국보다 2시간 5분이나 긴 시간이며 가장 짧은 영국보다는 4시간 5분이나 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습시간이 늘어난 만큼 운동시간이나 기타 문화 활동시간, 심지어 수면시간까지 포기하고 있다. 2004년 자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은 40대 성인의 수면시간보다 짧았는데, 이런 국가는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면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1)는 주5일제 부분도입 시점 전후를 비교하여 여가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만 10~18세)의 여가시간을 살펴본 결과 ‘주5일 수업제’ 부분도입(’05) 이후 오히려 여가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04년 4시간 33분에서 2009년 4시간 5분으로 28분 감소하였다.

요일별로 살펴보면(’04년 대비 ’09년), 토요일에 여가시간은 5분 증가한 반면, 평일 및 일요일은 40분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04년 대비 ’09년), 중학생이 가장 큰 폭(30분)으로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26분, 고등학생은 19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04년 대비 ’09년), 교제활동과 취미 및 기타활동 시간은 감소했고, 미디어 관련 활동 및 운동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5일 수업제 실시 이전 조사(’02)에서 ‘주5일제 실시 후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86.4%가 ‘그렇다(대체로+매우)’라고 응답해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결과상으로 실제 여가시간은 줄어든 것(28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늘어난 토요일 시간은 여가 대신 무엇으로 대체된 것일까. 이 해답은 청소년의 사교육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사교육시간(정규수업 외 수강)은 주5일제 수업 부분 도입 전인 2004년 51분에서 2009년 1시간 2분으로 11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04년 대비 ’09년), 토요일에 사교육 시간 증가폭(15분)이 가장 크고, 평일 11분, 일요일 1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이후 그 결과가 반드시 여가의 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활동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안전 문제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들의 35.5%가 “두려움을 많이 혹은 약간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으나 10대는 36.7%, 20대는 38.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역시 어린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두려움을 많이 혹은 약간 느낀다는 응답비중은 23.2%인데 비해 10대는 43.9%, 20대는 41.1%로 두 배 가까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연령대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15세 이상)

(단위 : %)

구분	매우 많이 느낀다	약간 느낀다	보통	별로 느끼지 못한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전체	10.1	22.1	28.7	28.8	10.4
10대(15~19세)	14.5	29.4	23.9	22.5	9.8
20대	13.7	27.4	27.2	22.7	9.0
30대	12.3	24.1	30.7	24.9	8.0
40대	9.2	22.8	30.7	27.9	9.4
50대	6.7	18.6	29.3	34.5	11.0
60세 이상	6.1	13.2	26.9	38.2	15.6

자료 : 통계청(2008) 『사회조사』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에도 지난 5년 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등으로 2004년 약 68만 개소에서 2009년 약 79만 개소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학교주변과 주거지역 인근에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RED ZONE),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 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반청소년의 생애경험률은 2009년 비디오방/DVD방 14.4%, 카페 34.2%, 호프집 및 소주방 14.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유해업소뿐만 아니라 유해매체도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건수는 지난 1997년 5,104건에서 2011년 5,361건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도 성인간행물에 대해 2009년 35.9%에서 2011년 41.1%로, 성인영상물은 같은 기간 28.7%에서 32.0%로, 청소년이 용불가 게임도 36.2%에서 47.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9~19세 인터넷게임 중독은 877천명(12.4%)으로 성인(5.8%)의 2배에 이르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2007년 1,280건에서 2010년 1,3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경찰청, 2011).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추진 등을 추진 중이며 ‘여성·아동보호대책’이 지역사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등을 추진 중이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데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2009년 피해율이 9.4%였으나 2010년 11.8%로 증가하였고 2011년 18.3%로 늘어났으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 '10년 대비 '11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민원이 중학교 35.6%, 고등학교 19.6% 증가(관계부처합동, 2012).

표 6 청소년 유해업소 수

(단위 : 개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82,157	686,234	768,689	760,386	789,468	796,113

자료 : 여성가족부(2011)

가정 역시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중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은 2007년 40.3%에서 2010년 53.8%로 13.5%나 증가하였으며 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0년 9,199건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다음으로 직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당시에 크게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전년대비 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는데 공공근로 등 정부의 개입으로 늘어난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했을 때 2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5년 이후 추세를 보면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여준다. 2010년에는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2009년보다 3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표 7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를 변화 추이 (2005~2010)

(단위 :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자		299	295	282	144	-71	323
공공행정 제외 취업자		276	285	286	101	-263	395
성별	남성	137	114	163	96	31	181
	여성	162	180	120	48	-102	142
연령	청년(15~29세)	-128	-180	-68	-118	-127	-43
	장년(30~54세)	241	299	145	187	-71	174
	고령(55세이상)	188	175	204	77	126	192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층 일자리의 변화이다.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청년층 일자리는 매년 10만 개 내외로 감소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를 보여준 2010년에도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에서만 일자리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확대 추세가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빈곤 수준은 실제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빈곤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로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1989년 8.6%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4%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0년 14.9%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미만을 중산층으로 규정해 본다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한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68.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56.4%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빈곤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지표는 지니계수로 상대 빈곤율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0.284에서 1999년 0.294로 증가하였고 2010년 0.31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빈곤의 확대는 전통적인 빈곤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빈곤층(new poverty)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앓거나 하는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자리의 감소,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고용 유연화에 따른 정년의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다문화 사회의 진전은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등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탈북 가정 등 다문화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데 국제결혼 총 건수는 2003년 24,776건에서 2011년 29,762건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의 외국인 거주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으로 2005년 53만명에서 2011년 12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도 2005년 6,121명에서 2011년 36,676명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삶에 글로벌화의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글로벌 사회로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된다면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일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세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글로벌화는 기업이 정신을 더 중시하며 자기고용형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확산 역시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미래의 기술 변화는 이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보공학(IT)을 비롯하여 생명공학(BT), 나노공학(NT) 및 융합기술의 발달과 지능형 로봇의 상용화 등이다(김기현 외, 2007). 정보기술의 발달은 개인미디어의 등장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소통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으로 청소년들이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 동시에 첨단기술의 발달은 청소년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지능형 로봇이 상용화되면 홈 네트워크 서비스와 가정용 로봇의 등장에 따라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가정의 이용자에게 정보가전제어, 양방향 디지털 TV, 헬스케어 및 원격교육 등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IT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Ubiquitous Robotic Companion: URC)이 2020~2030년 사이에 상용화되면 현재의 스마트폰과 같이 지능형 로봇을 각 개인이 보유하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정책 추진 핵심 키워드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 첫 번째는 **행복**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의 성격을 반영하는 지표로 겸손과 조화를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권이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서구문화권에 비해 행복도가 낮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도는 이런 문화적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자기 절제를 강조하는 문화와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인해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험이 적은 교육환경, 여가 및 문화 참여와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행복수준과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일상생활 경험 중에 성취감, 몰입감, 자기 발견의 경험이 적음을 의미하며, 이런 경험의 부족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이에 관련된 문화적·교육적·사회적 인프라의 양적 향상과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역량**의 문제이다. OECD에서 제안한 3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기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역량은 매우 우수하나 이를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율적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적 역량은 개개인의 능력과 권한이 강화되는 양방향 정보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급속한 다문화화로 인해 공동체 내 이질성이 증가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체험활동’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함께 청소년의 인성·창의성 발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며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이라는 키워드이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미래 세대의 경쟁력 및 사회적 부담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춘기의 급속한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기는 필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취약한 시기로서, 이를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가이드 함으로써 건강한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수준이 아닌 사회 수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립**이라는 키워드이다. 늦은 성인기의 시작은 단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생산성 및 경제력 약화를 유발,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21세기 현재 대부분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청소년세대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력화 추세 및 조기 퇴직 추세와 관련되면서 교육비용 대비 기대수입의 감소에 따른 미래 세대 전반의 빈곤화,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증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늦은 입직은 늦은 결혼으로, 늦은 결혼은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의 상승은 둘째 출산확률의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한다.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원은 단지 청년기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키워드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업소나 유해매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두려움은 어떤 연령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학교나 가정 역시 폭력이나 학대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완전한 안전지대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물망 형태로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합**이라는 키워드이다. 소득 양극화·중산층 감소·빈곤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계층차이의 증가, 국제결혼·취업이민자·탈북주민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화, 가치의 다양화에 따른 가치관 충돌 등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세대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평등·호혜·관용 중심의 가치관 형성 및 이질적 집단과의 교류 및 협력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 및 공동체에서 이질적 집단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반차별적 법과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청된다.

Ⅲ. 청소년정책 환경 진단 및 향후 추진 방향

1. 청소년정책 환경 진단

1) 정책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이해되거나 성년의 기준인 만20세를 넘지 않는 연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성별이나 인종집단과 같이 정책 대상 구분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제외하고 청소년이나 고령자 등은 사회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므로 환경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상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44년 「조선구호령」에서 요보호 아동의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했으나 「아동복지법」에서 기존 13세 이하를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 제정(1999년)에 따라 연령 규정도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있다.

세 번째로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 관련 법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곧,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 「민법」은 20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에게 발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자 연령을 19세로, 「국민투표법」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 대상 연령은 중복의 문제가 있으며 생애주기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 대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0~18세, 청소년기본법은 9~24세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 족부로 이관된 이후 추진된 「미래세대 희망플랜,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3)」과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 통합 및 대상연령을 만 25세미만으로 제안한 바 있다.

네 번째로 20대 청년층에 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청소년 연령 규정에서 20대를 포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13~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주된 정책대상이었으며 20~24세까지의 청소년 정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이처럼 청소년 연령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연령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9~24세에 이르는 청소년 연령 중에서

13~18세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양하고 9~13세와 19~24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최근 성인기 진입시점의 지연으로 인해 24세 이후 취업 이전까지의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의 지향점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2001)」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지향점으로 정책대상인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상’과 “덕·체·지의 조화로운 완성”을 제시하였으나 이후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2001)」에서 제시한 청소년상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의 청소년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초의 청소년헌장이 1990년 5월 제정·선포된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장이 처음 제정된 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음을 고려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청소년헌장을 개정된 바 있다.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본계획에 핵심역량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OECD(2005)는 학교 교육과정을 미래 핵심 역량, 핵심 학습요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추진했으며 1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를 추진하였으며 세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김기현 외(2010)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정부출연기관의 협동연구로 우리나라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 결과로 OECD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역량(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율적 역량)과 함께 사고력을 제시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래세대 희망플랜,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3)」과 「청소년기본법」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으로 “아동·청소년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육성 혹은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정책의 지향점으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정책 여건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할 것은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1월 18일 공포되었으며 3월 19일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 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할 수 있다. 대상 중심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간의 연계와 총괄 및 조정 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했을 때 제시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여성가족부, 2010). 이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출범과 함께 추진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은 범부처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이라는 맥락에서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통합적 청소년정책, 보편적 청소년정책,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 등 세 가지였다(여성가족부, 2010).

통합적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정책과 가족·여성정책의 연계라는 측면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교육·고용·복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정책영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이라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편적 청소년정책은 위거나 취약청소년 등 일부청소년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과 연결된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에서 청소년·부모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수요에 맞춘 정책 추진과 함께 청소년·부모, 교사·청소년지도자 등 중간수요자, 지자체 등 다층적 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기능 중심의 정책과는 달리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1년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27개 기관에서 255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제1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시 부처의 적극적 참여, 시행계획 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처간의 사업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범부처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시범사업 수준으로 일부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현재 16개 시도에서 634개 청소년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활동분야(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보호분야(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양분되어 있으며 전자는 시도 단위까지만 구축되어 있고 후자는 시군구 단위까지 구축되어 있어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주관부처와 지자체간 연계체계,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등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시설과 인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분야의 인프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설 인프라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된다.

2011년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은 총 738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176개, 청소년문화의 집은 215개, 청소년수련원 176개, 야영장은 43개, 유스호스텔은 121개, 특화시설은 7개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해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생명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하고 미래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FTA, DDA 등으로 인한 농업수입개방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농업생명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소년 수련시설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련시설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2008)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 및 수련시설 1개당 청소년 수가 13,159명으로 영국, 일본의 4배, 독일의 6배로 시설 인프라가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법정목표치 달성율도 청소년수련관은 '06년 현재 140개로 법정목표치(230개)의 61% 수준이며, 문화의 집은 188개로 법정목표치(500개)의 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 분야 인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는 2007년 14,809명에서 2011년 26,83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2011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462명, 2급 청소년지도사 17,143명, 3급 청소년지도사 8,225명 등 총 26,830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1년도에는 총 3,05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2,445명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82명, 2급은 2,262명, 3급은 707명 등이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종사할 경우 직무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은 2005년 수련시설에 배치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225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여 2011년까지 총 2,870명을 보수교육을 받았다. 보수교육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30시간(3박 4일)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도 294명에서 2012년도 351명으로 지원인원이 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어서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급 청소년상담사 275명, 2급 청소년상담사 1,773명, 3급 청소년상담사 2,757명 등 총 4,805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이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서 종사할 경우 직무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 2월 1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의 공무원 정원 추이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후반 체육부 청소년국의 정원은 42명에 불과하였으나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되면서 61명으로 늘었고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바뀐 뒤로 8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102명으로 늘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통합된 국가청소년위원회 때는 정원이 131명까지 늘어났다.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이관된 이후 정원은 120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정원은 45명으로 감소하였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의 적정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여부는 신중히 따져볼 문제이지만 지난 몇 년간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 예산은 주관부처가 국가청소년위원회였던 시기인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증가 경향이 이어졌지만, 이는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 예산을 합친 결과로서 청소년정책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으며(예로 2007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아동 및 청소년 총 1,057억 원 중 아동예산은 702억 원으로 66%를 차지) 여성가족부 이관 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12년 정부(안)에서 청소년정책 예산은 균특회계를 제외하고 2011년 959억 원에서 2012년 1,037억 원으로 8.1%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육성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의 경우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으며 복권기금이 43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297억 원이 증액되어 690.7% 순 증가해 청소년 육성기금 고갈 상황에서 다소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전체 사업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예산 규모는 크지만 각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집행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행계획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정책 환경 개선 방향

청소년정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의 기본성격으로 **선제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핵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여성정책, 고령자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성장을 위한 잠재역량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정책적 투자에 따른 효용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는 교육을 받는 시기이며, 성취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고, 지적·정신적 성숙의 시기이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는 시기라는 발달적 특성에 고려해 볼 때 국가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 부처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과 같이 국가재정법에 청소년예산 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기능 중심 정책과는 달리 각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기 청소년대상 정책 추진을 전기와 중기, 후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이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책이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 추진체계가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균형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 가족, 건강, 진로·취업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균형 있게 전반에 걸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체 청소년은 핵심역량 강화로, 취약·위기 청소년은 균등기회 보장, 사회적 지원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상 중심의 맞춤형 접근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실질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통계) 및 연구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력 평가(청소년정책이 다양한 청소년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경향성과 욕구에 따라 정책목표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향후 청소년정책 주요 추진 과제

1. 청소년정책 여건에 대한 SWOT

SWOT 분석은 내부 역량을 진단하고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에서 기회요인(Opportunities)과 위협 요인(Threats)을 추출하고, 청소년 실태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강점요인(Strength)과 약점 요인(Weakness)을 추출하여 SO전략(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ST전략(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O전략(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WT전략(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Strength) 요인은 높은 지적역량 수준과 학업성취도, 기술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및 활용, 개성 존중 및 감성 추구,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 등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점(Weakness) 요인은 낮은 자기주도성과 능동적 참여 부족,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부족, 배려와 관용의 문화 부족,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악화,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 등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Opportunity) 요인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대한 국제적 요구 증대, 유용하고 편리한 스마트 환경 확산, 청소년 참여 및 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글로벌 기회 확대, 부모 및 청소년 여가 시간 확대 등이다. 반대로 위협(Threat) 요인은 과도한 입시경쟁 환경, 가정의 자녀양육 및 보호기능 약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빈곤 위험 확대, 청년 노동 시장의 위축 및 불안정 고용 확대, 결혼·출산 지연 및 기피현상 심화,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 등이다.

먼저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SO 전략은 스마트 환경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개성 및 감성, 다양성 추구 경향을 살려 학습공간을 감성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어느 곳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적시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학습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강점이 있고 잘 구축된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ST 전략은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로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높은 지적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위협 요인들에 대처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유익한 매체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8 청소년정책 핵심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표

강점(S)	약점(W)
[S1] 높은 지적역량 수준과 학업성취도 [S2] 기술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및 활용 [S3] 개성 존중 및 감성 추구 [S4]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	[W1] 낮은 자기주도성과 능동적 참여 부족 [W2]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사회적 역량) 부족 [W3] 배려와 관용의 문화 부족 [W4]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약화
기회(O)	위협(T)
[O1]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대한 국제적 요구 증대 [O2] 유용하고 편리한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첨단기술의 일상화 [O3] 청소년 참여 및 체험 기회 확대 [O4] 청소년 글로벌 기회 확대 [O5] 부모 및 청소년 여가 시간 확대	[T1] 과도한 입시경쟁 환경 [T2] 가정의 자녀양육 및 보호기능 약화 [T3]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빈곤 위험 확대 [T4] 청년 노동 시장의 위축 및 불안정 고용 확대 [T5]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

표 9 SWOT 분석에 기초한 네 가지 청소년정책 핵심전략

[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	[WO전략] 약점보완 기회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적 교육환경 및 적시학습 강화 ◆ 다양한 학습인증 확대 ◆ 지역사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참여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추진 ◆ 청소년 신체 및 정신 건강 강화
[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	[WT전략] 약점보완 위협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강화 ◆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Youth Friendly Communities)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위기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WO 전략은 높은 지적 역량 수준에 비해 낮은 사회적 역량과 자율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의 체험 및 참여 기회 확대를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WT 전략은 정책적 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과제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물망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농산어촌, 시설아동, 장애청소년, 한부모 및 조손가정, 가출, 청소년 출원 청소년, 학업중단, 다문화 및 탈북 청소년 등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2. 향후 청소년 정책 주요 추진과제

1) 강점기반 기회활용 전략 (SO 전략)

이 영역은 높은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감성적이며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강점을 살려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편리함, 글로벌 기회 확대 등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① 감성적이고 청소년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

감성공학(Human Sensibility Ergonomics)을 적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감성을 정상·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학습 활동을 최적으로 지원하는 감성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건물을 비롯한 제반 학교 환경의 기능성, 예술성 등을 향상시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학습 환경, 학교 환경 구성하고 운동장 녹지화, 교육과정 운영 기반의 융통성 있는 학습 공간 구성, 학습공간과 교육기관 내/외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위생설비 등 완비 등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 설립 시 기존 공원 또는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과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학교환경을 통해 학생의 정서교육, 환경교육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적시학습(Just-In-Time Learning) 강화

청소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적시학습(Just-In-Time Learning) 환경 실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이버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학교를 중등학교의 종류로 포함시키고 사이버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인가요건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학교는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 센터 또는 학교 등이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적시학습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는 온라인 학습이수의 확대가 필요한데 온라인 학습 이수료 학교에서의 오프라인 수업 시수를 축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학습자 정보에 기반한 지능형 학습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학습양식, 학습수준 등 학습자 정보에 기반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학력 인증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학습자에게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학습 자료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다양한 학습인증 확대

현재 청소년 활동 및 교육환경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교육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가하는 조기유학생, 사교육 시장의 급속한 팽창, 학교 붕괴 현상 등은 경직된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학습인증확대를 위해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학습의 인증 검토 작업이다. 향후 대안학교, 홈스쿨링(home schooling), 초·중등교육단계에서 방송통신대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개방학교(open school) 등의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학년별 학력 인증제 도입, 고등학교 교과별 학력인증제 도입, 대안교육 학력인증 도입, 가정학교(home-schooling) 학력인증제 도입, 유비쿼터스 학습(U-Learning)을 통한 재택학습, 해외문화체험, 외국어 체험교육기관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정규교육과정의 연계 등을 확대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④ (가칭)@청소년의 목소리 추진

이것은 청소년 참여 혹은 자치활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학생회 등을 포괄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하고 지방의회에서 발언 기회와 청소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10%)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청소년 예산

참여제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청소년의 목소리)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상희 외(2009)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참여위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 중이며 참여위원의 활동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 형태이고, 캠페인 등 홍보 위주의 행사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들 활동의 정책반영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핀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매년 3월, 수도 헬싱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 초중고 학생대표,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대표, 기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각 학급별 및 학교별로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해 미리 선정된 지역적 의제들을 시장과 함께 토론하고, 실현 가능한 의제를 택해 예산까지 확정)나 「필리핀 청소년의회(Sangguniang Kabataan)」(청소년(15~19)들이 지역에서 의회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며 지자체 예산의 10%는 지역 청소년 문제해결과 교육 등에 배분)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매우 활성화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간과 SNS를 통해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강점기반 위협대처 전략 (ST 전략)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높은 지적 역량과 스마트 환경 적용력,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라는 강점은 살리고 다양한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①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세계 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한인 청소년들의 교류거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한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지원업무 지원 협약, 해외 한인아동·청소년과 한국아동·청소년과의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해외거주 한인 아동·청소년에게 모국문화 및 모국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주한외국인 청소년과의 교류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아동·청소년 축제 등 교류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문화존과 연계하여 주한외국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투게더

존(Together zone)」 운영, 외국 청소년 초청 장기체류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차원에서 IT 및 한국어 교육, 환경 및 보건위생 교육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청소년 교류 역시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간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추진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등을 정례화하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청소년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 실시(가치관, 언어생활, 미디어, 여가, 문화, 활동실태 등 조사), 「북한 바로 알기」 교육 실시, 탈북청소년 과의 교류프로그램 강화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교, 수련시설 등에 보급·운영하며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강화

후기 청소년(청년층)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주관부처가 분명치 않으며 청소년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12년 청년일자리 7만 1,000개 창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12년 대학생 1만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12년 총 1.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 든든하자금(ICL) 제도 개선)가 대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11; 국토해양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

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취업 희망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15~29세 청년층 대상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약 2개월간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 프로그램 운영, 이공대생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3~4주간 현장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해외유학 청소년, 해외취업 희망 청소년 대상으로 해외 우수기업이나 국제기구의 취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국제교류센터 내에 청소년해외취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직업체험관 내 해외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 창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비즈쿨(Bizcool)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용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이수 후, 실제 창직·창업에 앞서 인턴제를 통해 현장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인턴 수료자에게 고용센터 내 창업공간 우선 지원을 통해 실제 창직·창업을 토털 지원하고, 창직 및 창업 성공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 지원 역시 중요한데 청소년(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아동복지 퇴소 청소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SNS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고 정보통신 과소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긍정적 매체활용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등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력/적응력/대응기술을 키우는 것이다. OECD의 PISA에서 학습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ICT 활용능력은 예상 밖으로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생활시간조사 분석에 따른 컴퓨터 게임이용시간은 우리나라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긍정적 매체활용에 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청소년에 비해 이해력이나 적응력, 대응기술이 떨어지는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인도된 체험(guided participation) 및 훈련을 통해 자율적 정보통신 이용능력 강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청소년 연령별, 대상별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확대하는 한편, 비판적 미디어 이용능력 제고를 위해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미디어 이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콘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게임, 애플리케이션, 최신 기기 등을 선제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매니아층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약점보완 기회활용 (WO 전략)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높은 지적 역량과 스마트 환경 적응력이라는 강점은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나 자율성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권리 증진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주5일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시간과 체험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① 청소년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바우처’,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학생증’,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카드는 모든 청소년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해 주며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 사회기부 등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포인트를 주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도서구입, 문화 활동,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도록 해주며 취약·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동시에 위기청소년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청소년들이 비행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카드가 정지되거나 회수하며 돈의 충전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영국의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나 스코틀랜드의 영 스코트 카드(Young Scot Card) 등 외국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은 청소년의 핵심역량 강화와 유익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community youth center)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범부처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확대하는 두 번째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을 활동정보제공,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 바꾸자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항의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2007년까지 전국 3,477개 읍·면·동에 시설 건립 형태가 아닌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등 다중거주지역에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센터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라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의 구축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핵심역량의 개념을 탐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교육과정이나 자격체계에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교육혁신위원회(2007)는 OECD의 핵심역량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기반하여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예술적 감수 외등과 같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기반 학습체계 도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요한 개정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가지 활동영역은 OECD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핵심역량의 개념이 영역(domain)이 아닌 기능(function)이라는 점에서 모든 활동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자율적 행동과 연계되고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형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학습체계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향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해야만 하는 핵심역량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일화된 핵심역량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넘어서 모든 교과목에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현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리더십, 관용성, 갈등조정능력, 사회관계 개선 및 대인친화 능력 증진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청소년분야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주관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 법교육 및 법생활체험 등 법·질서 등 사회규범 준수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소통·나눔·기쁨 가족솔루션캠프 등을,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경제관 함양 및 건전 소비 실천 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문화재청, 문화부, 산림청, 환경부는 주말활용 역사·문화체험, 공연체험, 생태·환경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경찰청은 과학수사 체험 프로그램을,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 체험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자연, 교통, 에너지 등 전 분야의 멋과 여유를 가진 환경친화적 지역을 슬로시티로 지정하고 슬로비시티 홍보 투어 등의 프로그램(전남 담양, 장흥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은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게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초·중·고 주5일 수업제 부분도입('05년 월 1회, '06년 월 2회 토요일업 시행)이 이루어진 이후 7년 만에 전국 초·중·고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국무총리실은 2012 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11.6.14).

⑤ 지역사회 직업체험장(community workplace) 추진

이것은 읍·면·동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이용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장체험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체험 대상 직장은 소규모 자영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기업의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정은 청소년과 공동체, 그리고 기업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구체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이 자기 생활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성인 및 또래 구성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동체가 청소년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기반이 형성된다. 도시공동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구성원들간의 연대 결여임을 고려하면 이는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공동체에서는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미래세대 육성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의 가치와 태도를 전수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기회가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더욱 분명하다. 이 과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며 기업이 지역사회 공동체 출신의 유능한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질랜드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 체계의 구성에는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직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능력이 교육목표로 반영되게 만드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5일간의 직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청소년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플랜 강화」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이상의 직업체험 실시'를 정책방침으로 제시한 것이 5일간 직장체험학습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커리어 스타트 위크(Career Start Week)」로 불리며 2005년부터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전국의 138개 지역에서 2,020개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의 동경도에서는 이와 관련 2005년부터 공립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인 「두근 두근 위크 도쿄(わく(Work) わく(Work) Week Tokyo)」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에게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독려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성과 노동관·직업관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2005년 304개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625개교의 77,5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동경도에 위치한 공립학교 중 99%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높은 실시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 2개 학교 시범사업에 이어 2012년 혁신학교 실시 후 2014년 서울 전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청소년직업체험주간 사업 역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와 같이 1주일이나 1개월 단위의 프로그램이 아닌 6개월(1학기)에서 1년 정도의 장기적 진로체험을 제공하거나 영국 등의 갭 이어(gap year)와 같이 성인기 진입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⑥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 활동에 관한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시간 준수 및 내실화, 지역사회 스포츠 인프라 발굴 지원, 1인 1스포츠 「키즈클럽」 육성·지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스포츠 활동 중심 청소년문화존(Youth Cultural Zone)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스포츠 관련 야외프로그램, 인력풀 및 시설인프라 발굴·지원,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 보급사업 실시 등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7.1%(질병관리본부, 2010)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절한 영양을 갖춘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반씩 지원하여 시범운영 중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주 1회 밥상 수다 형식의 영양교육 실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충분한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또는 매점에서의 과일 무상 또는 염가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일 등 건강에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매점 모델인 ‘쉬는 시간’ 시범사업 추진을 서울시에 추진 중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 내 건강매점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아르바이트 등 수면을 저해하는 여건 개선하고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식생활 및 비만관리를 위해 「가정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및 영양교육 강화와 비만 및 저체중 예방대책 추진 및 비만유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만유발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구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라면, 커피, 튀김류 등) 판매 금지 단속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TV 식품광고규제,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도 도입,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성분 저감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 탄산음료 자판기 등 건강위해식품 판매 제한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또는 센터설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GMO 식품 등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및 안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질병 예방과 관련하여 B형 간염, 결핵 등 8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및 365일 접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를 확대하고(2009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국가가 지원) 청소년 개인별 예방접종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수칙 제정 및 보급, 「이동 구강진료실」 운영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의 보급, 우울 증상자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체계 구축,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및 가족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치료(심리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언어치료, 약물치료 등), 집단치료(사회성기술, 분노조절, 자존감 증진)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사회연계 학교 건강 관리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 「학교건강지원실」을 설치하여 「학교위기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치료의 장기화로 학교수업 중단과 학교복귀 시 학업공백 및 학교 부적응 문제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 쉼터,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건강검진에 성건강 관련 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소변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학생 건강검진에 추가하고 성 건강을 위한 자가진단테스트를 개발하고 대응 매뉴얼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약점보완 위협회피 전략 (WT 전략)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약점 요인을 보완하고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①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지역사회 선정

유니세프(UNICEF, 2005)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 도시(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CFC)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요건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법,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및 행정체계,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복지수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교폭력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 종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갖춘 지역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②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각 부처별로 해당 사항에 관한 권고 부분에 관한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희망센터를 16개 시도에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NGO나 NPO 단체에서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커뮤니티 세이프(Community Safe) -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범부처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확대하는 세 번째 사업은 위기상태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각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기초하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자원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부처가 어떤 기관이 지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상담과 보호, 의료, 자립, 교육

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화된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교육·복지 등 맞춤형기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세이프를 읍·면·동 수준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지원 지역 네트워크에서 CYS-net, Wee Center,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하고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 아동 및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사업,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사업, 아동 및 청소년상담 등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공부문 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이 요구된다.

④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내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 상담자 양성 및 활동 지원 강화, 폭력피해·가해자 사회적응 지원, 민간부분과 연계한 청소년폭력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정부, 시도, 지역단위, 학교, 경찰별 추진체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전담부서,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반(경찰)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문 인력풀 구성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활용, 학교예방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인성교육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폭력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폭력피해청소년 치유캠프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상담 및 단속 강화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상담망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입체적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실, 청소년교실 및 상담교실 운영 활성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 운영, 재범방지 교육 등 일대일 상담 활성화, 배움터지킴이제도 확대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⑤ 저소득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드림스타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나우스타트(서울시) 등을 통해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자립비용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딤씨앗통장(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은 저소득 아동과 국가가 1:1 매칭 저축하여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18세 이후 초기 자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전형 확대 및 등록금 감면을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양육비·교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험 바우처 사업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복지관광을 통한 국내여행 경비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⑥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교육청 내 Wee 센터에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명단을 파악,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송부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히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멘토링 서비스, 청소년(상담)지원 센터를 통해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특화 학교밖 교실인 ‘해밀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 및 복교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밀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교실로 검정고시 및 복교준비, 인성교육, 상담, 캠프, 경제적 후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해밀’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순 우리말).

이와 함께 위탁형 대안학교에 학습지도를 위한 교사를 파견하고, 위탁형 대안학교 학교급별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⑦ 다문화/탈북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다문화 청소년과 탈북청소년과 관련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 재개념화를 통한 지원 대상의 포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 태생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이주나 국제결혼 재혼 등에 의해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으로, 현행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대상을 1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 및 18세 이하 중도입국자녀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해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 및 이중언어(bilingual)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기반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을 확대하고 전문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1:1 멘토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초기적응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일반학교 편입 지도·진로지도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⑧ 가출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출청소년 통합 관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할 「중앙청소년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도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쉼터의 기본체제 정비 및 유형별 운영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 사회적 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또는 전문시설 운영하고 가출 예방을 위해 청소년쉼터와 지역내 학교간 연계를 통한 가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상담센터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기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⑨ 시설보호 및 시설퇴소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생활시설과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이용시설, 그리고 아동종합시설로 구분되며 2010년에는 280개소의 아동생활시설에서 17,119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를 받았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정책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보호치료 시설 등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호양육에 치중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 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설이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지만, 대학이하 재학,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육훈련중인 자와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 및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을 요청한 자 등은 보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시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 생활관 이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요·발달단계에 맞추어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퇴소 직전 아동이 직접 홀로 살아가기를 체험해보는

「자립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퇴소 아동 DB구축을 통한 자립지원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및 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⑩ 장애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확대하고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기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양육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청소년 보호 및 휴식지원 및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청소년 가정에 가족휴식 지원 및 가족상담·교육 등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⑪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과 관련하여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상담, 치료, 생활지원) 및 미혼모자 보호시설 확대, 청소년 한부모와 그 부모들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의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한 자립활동촉진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 상담·치료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하여 출산비 및 출산용품, 양육정보,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10년 17개소) 및 미혼모자 보호시설(10년 56개소)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그 부모들에 대한 갈등회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및 전문치료 지원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업지원을 위하여 학교정보공시제도에 학업중단 명시 의무화 및 청소년 한부모 학적유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학습권을 확보하고 미혼모자시설 등을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시설입소기간을 교육기간으로 인정하여 학습·자녀양육·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의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하여

자립활동촉진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㉔ 소년원 출원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소년원 출원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적 선도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센터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CYS-Net)에서 경찰, 검찰, 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적 선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료 공유를 통한 사례회의 및 선도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소집단 상담 시 지역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전문가·폭력예방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고 소년원 출원생 등 고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소년원 등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직업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배·김기현(2008). “일본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직업에 대한 이미지, 직업선택의 기준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3): 55-75.
-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4.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2030: 종합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I: 총괄 보고서.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장근영·임희진·김혜영·윤옥경(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남춘호(2005). “지식정보사회의 경력과 생애과정.” 『21세기 한국 메가트랜드 시리즈 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투자 전략(안).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전상진(2004). “학교위기에 대한 세대이론적 접근: 교육학적 모라토리움의 세대이론적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14(2): 195-218.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한국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1). 주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및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제4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onnet, F., Jose B. Figueiredo, and Guy Standing(2003),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Coleman, J. C. and Hendry, L. B. (2006[1999]). 청소년과 사회: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강영배 · 김기현 · 이은주 옮김. 경기: 성안당.

Rychen, Dominique Simon and Salganik, Laura Hers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세미나자료집 12-S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

인 쇄 2012년 7월 4일

발 행 2012년 7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